

논문 19

평준화와 사교육비

채 창 균*

1. 문제 제기

1974년 서울과 부산에 우선 적용되면서 시작된 고교 평준화 제도는 2004년 현재 23개 지역(시)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찬반 논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반대 논리 중 하나는 평준화제도가 고교생의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비평준화 지역내 학교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학생들을 모집하므로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 개선을 낳아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이주호·홍성창, 2001).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실증 연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실증 연구 결과가 어떤 명확히 합의된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이주호·홍성창(2001)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던 적도 있지만, 그 이후 모형을 다소 달리한 이주호·김선웅(2004)에서는 거의 유의미한 결과를 낳지 못했으며, 김현진·최상근(2004)에서도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렇게 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에 관련된 실증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 → 사교육비 지출 증대’의 메커니즘이 실증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2004)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므로써 이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답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절에서는 관련 실증 연구의 결과와 한계를 간략히 제시한다. 3절에서는 이용 자료와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를 개괄하고, 4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을 설명하고 분석 결과를 정리하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논의해보도록 한다. 끝으로 5절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2.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 및 한계

고교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대단히 제한적이다. 이는 이슈의 중요성이 낮아서 라기보다는 실증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로는 이주호·홍성창(2001)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연보 1998년 Tape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기본적으로 가구별 자료이기 때문에 고교평준화제도가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종합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해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교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이게 되므로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 고등학교 학생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 필요성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경쟁 압력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커질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는데, 이 두가지 서로 상반되는 효과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 이동 여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후자의 효과가 크게 문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교육비 지출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을 분리해내는 것이 곤란했다는 점이다.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 간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크게 상이하다면, 추정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¹⁾ 또 자영업자의 소득 자료가 없어 근로자 가구에 국한하여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도 한계로 남는다.

이 연구가 실증 분석을 통해 ‘학교선택권과 학생선택권이 인정되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평준화 지역보다 고등학생의 교육에 대한 초과수요가 적음으로써 과외지출이 그만큼 낮으며 이러한 효과는 초중학생의 고입 경쟁을 유발하여 과외를 증가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 수준’(p.52)임을 확인하였지만, 위에서 언급된 자료상의 한계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동일한 자료를 추정방법을 다소 달리하여 실증분석한 이주호·김선웅(2004)에 따르면, 비평준화 지역이 평준화지역에 비해 유의하게 사교육비 지출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이주호·홍성창(2001)의 연구 결과가 분석모형의 설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다지 강력한 것이 아님이 확인된 셈이다.

관련된 최근의 또 다른 연구로는 김현진·최상근(2004)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변량구조모형(Covariance Structure Modeling)을 통해 평준화변인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학교불만족변인을 매개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

1) 실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999년(1998년 자료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불가)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수의 2.02배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1.42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교 유형을 통제해주지 않을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적게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를 파악하고자 하였는데, 실증결과에 따르면 이주호·홍성창(2001)과 달리 평준화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사용된 자료의 한계는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일단 이 연구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전국 표본으로서의 대표성을 확보했는지가 의문이다.²⁾ 또 같은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된 자료에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고교 재학생의 학년 분포가 유의하게 다를 경우 추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점을 추정 모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자료상의 한계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자료가 전국적인 대표성(단, 제주도는 제외)이 확보되게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이라는 동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사교육비 지출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다.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중학생 이하의 사교육비 지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추론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시도하지 않는다. 이는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진학을 이유로 학생들이 지역간에 이동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된 곳에서도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진학을 지향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 지역 구분만으로는 엄밀한 분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3. 이용 자료와 기초통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고용패널 1차년도 조사자료(2003)를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한국교육패널 1차년도 조사는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게 학생(중학교 3학년생과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생,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과 학생의 부모(가구), 학생의 담임, 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행정가(주로 교무선생)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생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는데, 이들 학생에게 지출된 월평균사교육비의 경우 학생의 부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부 변수가 결측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 이용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수는 1,926명이다.

평준화 이외에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변수로 먼저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수준, 자산규모가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나 자산규모가 클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이 정상재(normal good)이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공교육의 양과 질에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호자(부모)의 학력수준도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의 학력수준이 높

2) 지역별로 설문지 회수율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광역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대체로 서울 지역의 회수율이 크게 낮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서울 지역이 모집단에 비해 과소하게 조사되었다.

을수록 자녀의 교육을 중시한다면 학력이 사교육비 지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에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부나 편모의 경우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도 있고 부모가 없는 가구는 부모가 있는 가구보다 해당 학생에 대한 교육열이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있는 정상적인 가구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을 수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보호자의 교육열이 높다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자녀 수의 경우에는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찍이 자녀의 수와 질간에 음의 관계가 있음을 수식을 통해 증명한 Becker and Lewis(1973)의 논의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아들과 딸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성별임금격차 등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동일한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딸에 대한 교육투자보다는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 비추어 본다면, 장남에게 교육투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과연 이런 측면이 존재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자녀의 첫째 여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에서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간에도 사교육 의존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육이 공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는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것이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의 격차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간의 소득격차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날 수도 있는 반면, 소득 수준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건의 격차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일수록 사교육의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사교육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할 것이라는 점이 생각될 수 있다. 또 이주호·김선웅(2004)의 지적처럼 표본선택(sample selection)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많은 가구들이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읍면 지역으로부터 도시 지역, 또 작은 도시에서 보다 큰 도시로 이주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읍면 지역이나 작은 도시에는 교육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표 1>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

구 분	지 역(市)	비 고	
특별시(1)	서울(74)		
광역시(6)	부산(74), 대구(75), 인천(75), 광주(75) 대전(79), 울산(00)		
도(5)	경기	수원(79), 성남(81), 안양(02), 부천(02), 고양(02), 과천(02), 의왕(02), 군포(02)	
	충북	청주(79)	
	전북	전주(79), 군산(81), 익산(81)	군산(90 해제, 00 재지정) 익산(91 해제, 00 재지정)
	경남	진주(81), 마산(79), 창원(80)	
	제주	제주	
12개 시도	23개 지역(市)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 주: 1) 강원, 충남, 경북, 전남은 미 실시 지역임.
- 2) 전남의 목포, 순천, 여수는 2005년부터 실시
- 3) 괄호안의 숫자는 시행 연도를 나타냄.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되는 앞에서 열거한 여러 변수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과연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2002년 현재 고교평준화 실시 지역 현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가 모두 평준화지역이며, 중소도시 중에서는 수원, 성남 등 16개시가 평준화체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을 제외한 여타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이다.³⁾

이제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이 실제 사교육비 지출과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한 교차표를 통해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주요 변수별로 평균적인 사교육비 지출 현황을 보면 <표 2>와 같다.

예상대로 가구소득이 높아지면 지출되는 사교육비용도 커진다.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6.1만원에 불과한 반면, 소득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61.9만원에 달한다. 자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구의 자산규모가 커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도 늘어난다. 자산 규모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7.2만원에 불과한 반면, 자산규모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85.5만원에 이른다.

보호자의 학력 역시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보호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크다. 보호자의 학력이 중졸 이하인 경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15.7만원에 불과한 반면, 대학원 이상인 경우에는 51.9만원에 달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간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지출 수준의 격차도 확인된다.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의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31.8만원인 것에 비해, 부모가 없거나 편부, 편모 가구의 경우 14.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편 고교평준화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내에도 특목고처럼 입학생을 경쟁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들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에는 비평준화지역의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부모의 교육열도 사교육비 지출수준과 정의 관계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부모의 교육열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가지 문항을 활용하였다. 가구 설문 중 ‘귀택에서는 _____ 학생의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와 ‘귀택에서는 _____ 학생의 교육을 위해(좋은 학교나 학군, 대도시) 이사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 각각에 ‘예’라고 답한 경우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교육 이민 또는 유학을 고려한 가구의 경우(49.6만원) 그렇지 않은 가구(25.3만원)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2배 가까이 높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한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46.6만원으로 그렇지 않은 가구의 28.4만원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 역시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대로 자녀수가 적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높아지며, 이러한 경향은 자녀수를 전체적으로 보거나 고등학교 이하 자녀수로 보거나 간에 별 차이가 없다. 자녀가 4명 이상일 경우(14.8만원) 자녀가 1명인 경우(34.9만원)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자녀의 성별로 볼 때 아들에 비해 오히려 딸에게 지출되는 평균적인 사교육비 수준이 근소하나마 높게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아마도 딸의 경우 상대적으로 교액이 소요되는 예능 관련 과외 지출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남(녀)일 경우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33.8만원으로 차남(녀) 이하의 26.0만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장남(녀) 우대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우선 가구 설문으로부터 ‘_____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묻는 문항을 고려하였다. 보호자의 자녀 학교에 대한 만족도인 셈인데, 이 만족도가 높다면 학교에서의 교육이 비교적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에 만족하지 않는 부모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다소 높은 편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다. 이것은 두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여기에서의 만족도가 부모의 주관적 의견일 뿐이므로 실제 학교 교육의 충실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교육이 충실해진다고 해도 사교육이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사교육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학교 관련 변수로 학교에서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학교 행정가에 대한 설문)를 고려할 수 있다. 평준화와 사교육비를 연계지우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수준별 이동 수업을 통해 수업받는 학생들의 동질성이 높아진다면 수업의 효율이 제고되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균값을 비교해보면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사교육비 수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나 광역시의 괴외비 지출 수준이 거의 2배에 달하며,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소도시나 광역시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어, 지역간의 격차가 현저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볼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간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도 현저하다. 비평준화 지역에 비해 평준화 지역에서 사교육비가 2배 가까이 지출되고 있다.

<표 2> 주요 변수별 사교육비

	기준	표본수	사교육비(만원)	F값	유의확률
월평균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90	6.1	112.6	p<0.01
	100~200 미만	295	10.9		
	200~300 미만	515	20.3		
	300~400 미만	471	31.2		
	400~500 미만	242	42.4		
	500만원 이상	293	61.9		
자산	1천만원 미만	80	7.2	85.3	p<0.01
	1천만원~5천만원	259	12.8		
	5천만원~1억원	445	20.0		
	1억원~3억원	731	30.7		
	3억원~5억원	219	47.0		
	5억원~10억원	125	65.0		
	10억원 이상	40	85.5		
보호자의 학력	중학교 이하	349	14.5	46.37	p<0.01
	고등학교	956	26.3		
	2~3년제 대학	108	37.0		
	4년제 대학	410	46.0		
	대학원 이상	99	52.0		
부모 모두 존재 여부	편부, 편모 또는 부모가 없음	166	14.2	2.77	p<0.01
	부모 모두 있음	1,760	31.8		
이민 또는 유학 고려 여부	고려한적 있음	394	49.6	2.64	p<0.01
	고려한적 없음	1,532	25.3		
학업을 위한 이사 여부	이사경험 있음	198	46.6	2.34	p<0.01
	이사경험 없음	1,728	28.4		
자녀수(총)	1명	150	34.9	9.6	p<0.01
	2명	1,360	32.0		
	3명	339	24.8		
	4명 이상	77	14.8		
학생 성별	남	1,079	29.0	1.17	0.01
	여	847	31.8		
학생의 첫째여부	첫째	1,056	33.8	1.49	p<0.01
	첫째 아님	870	26.0		
학교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만족함	914	29.4	1.01	0.93
	만족하지 않음	1,012	31.0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	이동수업 실시	1,116	30.2	1.06	0.37
	실시하지 않음	810	30.4		
지역	특별시	419	50.0	78.0	p<0.01
	광역시	512	28.2		
	중소도시	643	27.9		
	농어촌지역	352	14.1		
평준화여부	평준화	1,221	36.6	2.7	p<0.01
	비평준화	705	19.3		

그러나 지금까지 제시된 주요 기초통계는 다른 조건들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비교 인만큼,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경우 모두 평준화 지역에 속하며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낮은 읍면 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에 속하므로, 평균적으로는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조건이 통제된 상태에서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 절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처럼 회귀 분석이 필요하다.

4. 추정 모형과 추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고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식을 추정해본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평준화의 효과를 보기 위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설명변수들과 더불어 학교가 평준화 지역에 속하는지, 비평준화지역인지를 보여주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고려한다. 그밖의 설명변수로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보호자(부모)의 교육년수, 부모가 모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를 구분하는 더미변수(부모가 모두 없거나 편부, 편모 가구인 경우=1), 보호자의 교육열을 나타내는 두가지 더미변수(교육 이민이나 유학에 대한 고려 여부(고려시=1)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이사 경험 여부(이사 경험시=1)), 자녀수⁵⁾와 해당 자녀의 성별(남자=1), 첫째 여부(장남(녀)=1), 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만족하는 경우=1),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실시=1), 지역(읍면 지역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로 구분)이 고려되었다. 또 평준화 지역 여부와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의 교차항을 또 다른 설명변수로 고려하였다.

이들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2학년 2학기와 겨울방학 동안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30.3만원에 달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대규모 조사인 김양분 외(2003)에 의할 경우(조사시점: 2003년 9월~10월) 일반계 고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제 다른 조건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평준화와 사교육비 지출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OLS를 통해 회귀식을 추정해보기로 한다. 종속변수가 월평균 사교육비이므로 사교육을 시키지 않은 가구의 경우 그 값이 0이 될 것인데, 월평균 사교육비 문항에 0이라고 응답한 가구에서 실제 사교육비 지출이 없었다면 OLS 추정만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다시 말해

4) 한국교육고용패널(2004) 자료에서 비평준화 학교로 간주할 수 있는 특목고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를 통틀어 1개교에 불과하다.

5)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녀수를 고등학생이하의 자녀로 국한해서 분석해보더라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절단된 자료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OLS 추정만으로도 큰 문제가 없다.⁶⁾

추정 회귀식은 2가지이다. 먼저 서울과 광역시,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전지역을 대상으로 회귀식을 추정해본다. 그런데 이 경우 서울과 광역시는 모두 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되고 읍면 지역은 모두 비평준화 지역으로 분류되므로 지역더미변수와 평준화 지역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높아 다중공선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서울과 광역시,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동일한 회귀식을 추정해보았다.

<표 3> 변수의 정의와 기초통계

변수	정의	평균(표준편차)
소득	월 평균 가구소득(만원)	322.33(204.71)
자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백만원) (각 범주별 중간값 부여, 다만 1,000만원미만의 경우 500만원, 50억 이상의 경우에는 50억으로 간주)	226.37(342.49)
보호자의 학력	보호자의 교육년수 (중퇴나 수료일 경우 중간값 부여)	13.0 (3.81)
편부, 편모 또는 부모가 없는 경우	편부·편모·부모가 없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09
이민 고려 여부	자녀교육을 위해 이민고려 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1
교육을 위한 이사 여부	자녀교육을 위해 이사를 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0.10
자녀수	가정의 자녀수	2.19(0.67)
성별	남자면 1; 여자면 0	0.56
장남(녀) 여부	장남(녀)면 1; 그렇지 않으면 0	0.55
학교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면 1;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면 0	0.48
수준별 이동수업 실시 여부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58
서울	서울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3
광역시	광역시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26
중소도시	중소도시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3
도시지역	중소도시 거주자중 도시지역(동)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읍,면) 0	0.83
평준화	평준화 지역에 거주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64
수준별 이동수업 * 평준화	평준화 지역내에서 수준별 이동수업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0.38

추정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월평균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이 유의하게 커진다. 전국을 대

6) 그러나 0으로 응답한 가구의 실제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0이 아닐 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OLS보다는 Tobit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즉, 만약 좌측 절단값이 존재한다면 Tobit 모형의 추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OLS와 더불어 Tobit 모형도 같이 추정해 보았는데, 두 결과 간에 큰 차이가 없어 Tobit 모형의 추정결과는 게재하지 않았다.

상으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구소득 100만원의 차이가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을 5만원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수준 역시 사교육비 지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아지는 것은 소득에 따른 교육성과의 격차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부모세대의 빈부격차가 자녀의 교육성과 격차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획득 능력의 차이를 유발해서, 자녀세대에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재생산되는 사회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 할 것이다.

보호자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양상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편부, 편모 또는 양친이 모두 없는 가구)를 비교할 때 추정치의 부호는 기대대로 나왔지만 그다지 유의하지는 않았다. 평균적으로 두 집단간에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귀분석에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마도 월평균 소득이나 자산 등이 통제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교육열이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확인된다.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이나 유학을 고려했거나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사를 해본 적이 있는 부모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으며 그 차이도 각각 월평균 9만원 수준에 달할 정도로 크다.

기대대로 자녀수가 많을수록 1인당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진다. 그러나 대체로 아들이나 딸이나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은우(2004)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소자화(少子化)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딸과 아들의 차별 양상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교육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아들과 딸 사이에 차이가 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딸에 대한 교육투자보다는 아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우선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구 내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딸의 경우 아들에 비해 예체능 분야의 전공자가 많고, 이 분야의 사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장남(녀)일 경우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아지는데, 이 역시 이은우(2004)의 결과와 동일하다.

부모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효과가 그렇게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유의하게 줄어들지만, 중소도시에만 국한해서 분석할 때에는 부호는 기대대로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 부호는 기대한 방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수준별 이동수업과 평준화여부간의 교차항도 어떤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다.

전국을 대상으로 추정할 경우 지역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다른 조건이 통제되더라도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월등히 높다. 읍면지역에 비해 월평균 14.7만원 정도가 추가 지출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지역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서울 지역에 교육열이 높은 부모들이 집중되는데 그 측면이 우리의 회귀모형에서 충분히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단가가 높고 질적으로 우

수한 사교육 공급이 주로 서울 지역에서 제공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회귀분석한 경우에도 일부 읍면지역 학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고려해주기 위해 학교소재지의 주소가 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도시지역=1, 그렇지 않고 읍, 면 등으로 끝나는 경우는 도시지역=0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설명변수에 포함시켰는데, 부호는 기대대로 나왔지만 통계적으로 그렇게 유의하지는 않았다.

끝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평준화 변수의 경우 부호는 양의 값을 보이거나 유의하지 않았다. 평준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일견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비평준화 → 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 →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 → 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지적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설령 그 차이가 유의하다고 가정하더라도 가구의 소득 수준이나 부모의 교육열, 지역적 차이 등에 비해 사교육비의 격차를 유발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 할 것이다.

이렇게 평준화 여부가 사교육비 지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까닭은 이주호·김선웅(2004)의 지적처럼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에서의 교습과 운영에 있어서 충분한 자원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 지적은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공교육의 질 개선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적, 제도적, 구조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평준화제도의 철폐만으로 공교육의 정상화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비평준화로써의 전환을 통해 공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교육과 사교육이 유효한 경쟁관계에 있지 않다면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사교육의 질이 공교육의 질보다 훨씬 뛰어나다거나(그래서 비평준화제도로 인해 기대되는 공교육의 질 개선만으로 사교육과의 질적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계가 있다거나), 사교육의 내용이 공교육과 다르다면(예를 들어 사교육이 선행학습에 치중한다면) 공교육의 질 개선과 무관하게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 공교육의 질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학진학을 위한 학생들간의 경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사교육에 여전히 의존하게 되는 양상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다.

특히 백일우(1999)의 지적처럼 학부모의 과외선택행위가 죄수들의 딜레마 게임(Prisoners' Dilemma Game)과 유사한 의사결정행위에 기인한다면,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소수 학생에 그치는 것에 아니라 다수에게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이 과외가 성적 향상에 주는 효과를 굳게 믿고 있다면, 학부모 모두가 과외를 시키지 않는 파레토 최적 상태가 균형이 될 수 없고, 다른 학부모가 ‘과외’전략을 선택할 것을 예측하여 자신도 최선의 전략인 ‘과외’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표 4> 회귀분석 결과

변수명	전국		중소도시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월평균 소득	0.052	(0.004) ^{***}	0.040	(0.007) ^{***}
자산	0.013	(0.002) ^{***}	0.020	(0.005) ^{***}
보호자의 학력	0.831	(0.174) ^{***}	1.008	(0.263) ^{***}
편부·편모여부	-2.529	(2.412)	-3.686	(3.517)
이민고려 여부	8.951	(1.756) ^{***}	6.189	(2.730) ^{**}
이사 여부	9.341	(2.240) ^{***}	6.076	(3.587) [*]
자녀수	-3.114	(0.767) ^{***}	-2.815	(1.148) ^{**}
자녀의 성별	-2.405	(1.312) [*]	-1.950	(1.935)
장남(녀) 여부	3.270	(1.339) ^{**}	2.928	(1.979)
학교에 대한 만족도	-2.683	(1.335) ^{**}	-2.510	(1.962)
수준별 이동수업	-2.295	(2.180)	-2.509	(2.553)
서울	14.737	(3.131) ^{***}	-	-
광역시	0.274	(3.031)	-	-
중소도시	3.732	(2.236) [*]	-	-
도시지역	-	-	3.718	(2.783)
평준화	1.723	(2.727)	4.282	(2.961)
수준별이동 *평준화	1.752	(2.824)	-3.771	(4.104)
Adj R-Sq	0.613		0.553	
관측치	1,885		767	

5. 결론에 대신하여

이 연구에서는 고교평준화제도가 과연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인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교평준화제도가 사교육비 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간 사교육비 의존도 증대의 ‘주범’으로 평준화 제도가 지목되어 왔던 것에 비하면 대단히 뜻밖의 결과라고 할 것이다. 오히려 평준화 제도와는 무관한 부모의 교육열이나 가구의 경제적 수준, 서울의 지역적 특성 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와 유사 논리로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될 수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경우에도 사교육비를 줄이는 유의미한 효과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학업능력별로 동질적인 학생들이 집결 →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 → 공교육의 질 개선으로 사교육의 필요성 감소’라는 논리가 실제 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말해 동질적인 학생들이 모인다고 반드시 효과적인 수업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고, 또 공교육의 질 개선만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후자의 가능성은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하더라도 그다지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던 본고의 실증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물론 평준화제도가 지속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평준화제도는 사교육비에 대체로 중립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혹은 평준화 제도의 철폐없이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사고를 접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평준화제도의 철폐만을 사교육문제 해결의 핵심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으로는 기대했던 사교육 문제 완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다차원적인 이해를 통해 유효한 사교육비경감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2000). 『한국교육개혁의 흐름과 향후 발전방향: 1995-2010』
- 김양분 외(2003). 『사교육 실태 및 사교육비 규모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현진·최상근(2004). “고교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분석”, 『한국교육』, 제31권, 제1호 pp. 365-383
- 김혜숙(2004). “고교 평준화와 사교육비 문제”, 한국교육학회 소식지
- 박기백(1998). “사교육비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재정논집』, 제13집, 제1호. pp. 149-163
- 박부권 외(200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진단과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연구, 특-15
- 백일우(1999). “과외행위에 대한 교육경제학적 이해”, 『교육학연구』, 제37권, 제4호, pp. 294-305
- 이주호·김선웅(2004). “학교 정책과 과외의 경제 분석”, 『중등교육 평준화 정책의 분석과 대안』, 이주호·우천식 편저, 한국개발연구원,
- 이주호·홍성창(2001). “학교 대 과외: 한국 교육의 선택과 형평”, 『경제학연구』, 제49집, 제1호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제22권, 제2호
-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대책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 2003-지정-19
- Becker, G. S. and H. G. Lewis(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1, no.2, 279-288